

국민 62.7% “대기업 온라인플랫폼 규제해야”

[시장경제신문 창간 10주년 여론조사]

골목상권 침해 논란 ‘플랫폼 대기업 규제’ 의견은?

PNR 의뢰, 18~19일 휴대전화 RDD 방식 실시

62.7% “소상공인 보호 위해 대기업 규제해야”

27.7% “소비자선택권 보장 위해 규제 말아야”

지역,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규제 찬성’ 50% 넘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대기업 규제, 일명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온플법 제정을 반대한 여론은 약 28%에 그쳤다.

시장경제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PNR(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플랫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규제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는 설문 응답자의 62.7%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규제 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27.7%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지역별, 성별 차이 없이 고르게 나왔다. 서울 지역 거주자 중 63%가 플랫폼 대기업 규제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강원·제주 69.8%, 부산·울산·경남 67.4%, 광주·전남북 63.5%, 서울 63%, 경기·인천 61%, 대전·세종·충남북 58.9%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 비중은 남성 64.8%, 여성 60.6%가 플랫폼 대기업 규제에 찬성했다.

연령대별 응답률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겼다. 만 18세부터 20대 연령에서는 55.3%가 찬성 응답을 택했으며, 30대 59.3%, 40대 71.2%, 50대 66.2%, 60대 60.8%, 70대 이상은 61.5%가 플랫폼 대기업 규제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50세대에서 특히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9월부터 3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해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 등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촉구했다.

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골목상권 침해를 물론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 연합회 주장의 요지이다. 연합회는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규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5년 전부터 거대 IT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플랫폼 청문회를 개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소상공인 시장을 지키기 위해 일부 산업군을 일정기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 카카오가 콜택시 사업을 시작으로 대리운전업,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퀵서비스 등에 진출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올해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했으며 현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야놀자는 올해 10월, ‘야놀자 케어’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예약 취소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동 플랫폼에 가입된 숙박업소는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플랫폼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13.4%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피조사자 선정은 휴대전화 RDD 100%, 조사방법은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동 조사의 응답률을 6.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유진 기자 amy311@meconomynews.com



벼랑끝 자영업자들… ‘살려달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정부의 방역 강화안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선 앞두고 ‘물가에 기름 부을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전, ‘3월’ 인상 요청에 정부, ‘유보’
가스요금 인상 등 공공물가도 제동

정부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일각에서 인상을 늦추면 나중에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나 당장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셈이다. 다른 공공요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분기(1~3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올 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BC유 등의 가격 급등을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년 1분기

조정단가를 kWh당 29.1원으로 산출하고 정부에 3월 인상안을 냈다. 하지만 정부가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23일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3원)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해 4분기(10~12월) 요금 인상을 결정했었다.

전기료는 한전이 발표하지만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국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가스 등도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비용 증가 압박이 커져 내년초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불가피하게 10%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이후 동결 상태다. 요금 동결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올 해 말까지 1조5000억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요금을 계속 동결할 경우 내년 3월 말 미수금 규모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가스공사는 지금 요금을 일정 부분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충격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거라는 태도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한전이 통제할 수 없는 발전연료비 변동을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해 한전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려는 취지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거듭 유보권을 행사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올 2분기와 3분기에도 연동제에 따른 인상 조정을 막았다. 4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올리면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전기요금이 올랐으나, 실제로는 1분기에 3원 내린 것을 되돌린 것에 불과해 현재 전기요금은 지난해 그대로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인상 대기 중이던 공공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2022 칸 라이언즈



LIONS

One moment can change everything.

접수기간: 2022년 1월 20일 ~ 4월 14일

접수방법: www.canneslions.com 홈페이지 접수

접수비용: 출품 부문별 상이

어워드 발표: 2022년 6월 20일~24일

※출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칸라이언즈 출품안내문 참조

출품 접수 시작합니다